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특별법안으로 본 '광주·전남 통합시의회'는... 기대·우려 교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안에 담긴 통합시의회는 어떤 모습일까.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일 공개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법'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가 통합되면 기존 시·도 광역의회는 폐지되고, '광주전남특별시의회' 깃발 아래 하나로 합쳐진다.

특별시의회는 법에 따라 다양한 권한과 특례를 얻게 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원 자율화. 현재는 지방자치법상 인력 기준, 즉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통합되면 의회사무기구 조직과 정원을 '특별시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인력 설계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예산 독립성도 강화된다. 집행부(시장)가 의회예산을 짜는데 간섭할 수 없고, 의장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할 수

조직·인력·예산·보수·감사까지 '특별시 조례'로 자율화... 권한 강화 의원정수 조정은 선거법 등 엄혀 법안에서 빠져 추후 논란 일 듯

있다. 시장이 의회 예산을 감액하면서 시장이 반드시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감액 방지 의무조항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눈길을 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을 더 폭넓게 배치토록 했다. 의원들의 풀뿌리 입법·정책 역량에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별 차등 배치 가능성은 열려있다. 또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활동비도 특례로 분류해 특별시 조례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별도의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사무

감사의 경우 특별시 조례로 자율화하도록 특례를 뒀고, 감사 방식과 절차도 의회가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조직에서 인력, 예산, 보수, 감사까지 모두 특별시 조례로 자율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반면 논란이 된 의원 정수 조정 부분은 특별법이나 특례로 담기진 않았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광주는 6만 명, 전남은 2만9000명으로, 대표성 논란이 적잖지만 물리적으로나 절차상 불가능하고 전례도 없다는 판단에 일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존 시스템 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 정수 변경은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변경해야만 가능하고, 총원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의원 정수 감원 또는 증원 여부에 따라 추후 적잖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논란 탓에 대전·충남 통합특별법도 관련 규정을 특례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특별시의회로서의 권한과 자율권 강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광주와 전남의 의원수 불균형은 결국 지역 정치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고 15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일상 여러 분야에서 주민 불편 해소, 규제혁신을 장려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난 한 해 추진한 규제 발굴, 개선 활동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종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구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북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전부개정·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사례 등 호평

으로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과제 발굴', '주민 체감형 자치법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개선', '규제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의 4개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행정 전반에서 적극적인 규

제 개선의 기반을 강화한 점과 휠체어 탑승 장애가 장착된 차량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한 사례가 호평받았다.

또한 북구가 건의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방안'이 중앙부처에서 최종 수용되면서 관련법 개정

검토가 이뤄지는 등 지자체 주도의 전국 단위 규제 개선 노력도 인정받았다.

이에 북구에서 유일하게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포상으로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규제혁신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아이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있어서 매주 치료실을 가야 하는데, 생업 종사와 함께 돌봐야 해서 무척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특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맞벌이 등 사유로 긴급상황

광주 남구,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큰 인기

통합돌봄 특화 사업 첫 시행, 작년 527건 이용

에 대처하기 힘든 가정을 위한 통합돌봄 지원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보호자 불안 해소와 아이들의 정기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은 273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2월부터 12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이들에게 제공한 서비스 건수는 527건에 달했다. 월평균 48건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 1인당 평균 2회 정도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 연평균 이용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생과 미취학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527건 중에 초등학생이 330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학 아동은 158건(30%)으로 뒤를 이었다. 또 중학생 30건(5.7%)과 고등학생 9건(1.7%)도 긴급 도움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는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가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이바지함에 따라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9,000만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임재철 기자

서구, 방문의료·퇴원환자 돌봄 한층 강화

태영21내과의원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협약 체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거동불편 어르신 재가생활 지원에 나선다. 서구는 15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태영21내과의원(대표 양태영)과 방문의료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방문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의료 취약계층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다. 양 기관은 방문진료를 비롯해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재택의료 전반에 대해 협력한다.

서구는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첨단가죽연합의원, 시니어통합의원 등 의료기관 2곳과 서구보건소가 참여해 운영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795명이 총 1만6천여

회에 걸쳐 방문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퇴원환자의 재가복귀도 돕는다. 서구는 '돌아홈' 사업 통해 퇴원 시 동행·이동지원과 함께 방문의료·가사·식사·이동·주거 지원 등 단기집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입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퇴원 후 바로 귀가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중간의 집' 내 하우스'를 운영하고 방문의료·운동·일상생활지원, 돌봄교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재택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퇴원환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4시간 돌봄체계와 공공 의료돌봄 모형을 구축해 통합돌봄을 선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석우 기자

동구 '고립·은둔 주민 집중 발굴 기간' 운영

14~30일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활용, 숨은 위기가구 찾아

광주 동구는 사회적 고립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고립·은둔 주민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의 핵심 전략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동구는 고지서 송달 과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동구는 1월 중 발송되는 약 6만여 건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에 고립·은둔 주민 발굴을 위한 안내 문구와 신고 방법을 함께 삽입했다. 이는 단순한 세금 고지를 넘어, 행정 서비스가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 가구와 직접적인 접점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혁신적 홍보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방 등 한정된 공간에 머물며 외부와의 사회적 교류 없이 3개월 이상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동구는 이들을 돕기 위해 그동안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25년 상·하반기에 운영된 은둔형 외톨이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또한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굴된 대상자가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동구는 이번 집중 발굴 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가구 방문과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의 고립을 조기에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동구 관계자는 "고립과 은둔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사회적 과제"라며 "자동차세 고지서라는 생활 밀착형 매체를 통해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또한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굴된 대상자가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동구는 이번 집중 발굴 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가구 방문과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의 고립을 조기에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동구 관계자는 "고립과 은둔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사회적 과제"라며 "자동차세 고지서라는 생활 밀착형 매체를 통해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